

보도시점 : 2026. 2. 26.(목) 11:00 이후(2.27.(금) 조간) / 배포 : 2026. 2. 26.(목)

AI 모빌리티 시대,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시작됩니다

【관련 국정과제】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 '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 '28년 UAM 상용화... 국민이 체감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마련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교통과 도시 전반에 적용해 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고, '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향후 5년 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

- 이번 로드맵은 지난 '22년 9월 발표되었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의 청사진이다.
 - 그동안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3.4)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10) 제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 이 과정에서, 자율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이번 로드맵은 AI를 기반으로 5대 모빌리티 분야를 혁신하는 전략을 담았으며,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자율주행 강국도약) '27년 AI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26년 광주광역시에 자율차 200대 투입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6~)하여 '실증 → 데이터 수집 → 학습'에 이르는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규제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율주행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사업을 제도화('26~)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을 추진한다.
- ② (도심항공 모빌리티^{UAM·드론}) '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UAM 상용화부터 시작하여 '30년 민간 주도 서비스 도입을 본격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체인증, 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27), 버티포트, 통신망 등 공공 인프라 기반(~'28)도 구축한다. UAM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기초·성장기·미래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실증 → 초기 상용화 → 본격 상용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한다.
- 드론의 국산화를 위해 소방, 항공, 농업 등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및 모터, 영상송수신장치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26~), 드론이 국민의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공원 등 드론 공역을 대폭 확대(~'27)한다.
- ③ (탄소중립 모빌리티) 신차 중 친환경차 비율을 '30년까지 40%, '35년까지 70% 달성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5」를 지원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본격 시행('26),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선장치 개발('26) 등을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인다.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사업과 제도화('26)를 추진하고,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성능평가·안전검사 제도 시행('27)한다.
- 그 밖에, 수소 전세버스 차령연한을 완화하는 등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함께, 수소열차 실증('27),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착공('29, 시험선로 12km) 등 다양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도입을 지원한다.

④ (일상 모빌리티) 자율주행 기술도입 준비('26), 공공플랫폼 구축('27)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 법제정을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26), 원격운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27), 통합교통서비스(MaaS) 앱 고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한다.

⑤ (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 3D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등 미래 모빌리티에 활용될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로봇·모빌리티 친화적 건축을 위한 스마트+빌딩법 제정('26) 등 도시와 교통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 이번 로드맵은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등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및 '26~'30년 국토부 업무계획의 상세 추진계획을 담은 것으로,

- '25년 12월 개최된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을 통해 초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발표되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로드맵 전체 보고서 다운로드 가능

□ 국토부 홍지선 제2차관은 “산업 전 분야에서 AI전환으로 혁신의 속도가 전례없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로드맵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 “국민들께서 미래 모빌리티를 하루 빨리 일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세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배성호 (044-201-3835)
		담당자	사무관	이기림 (044-201-3838)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성장엔진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2026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UAM 수도권
실증 인프라 조성



배터리 인증제
본격 시행



PM법
제정



국토위성
2호 발사



레벨4
자율차 출시



DRT 공공플랫폼
구축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확대



전기차 배터리
성능평가 시행

2027



UAM 공공서비스
본격 착수(의료·재난 등)



자율주행
란제 제도화



수소열차
상용화 개시



스마트+ 빌딩
첫 선

2028



드론 5대 완성체
개발 완료(소방·항공용)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착공



전국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완료



EV 컨버전
개발 완료(내연차→전기차)

2029



UAM 민간서비스
본격 착수



자율주행 AI
데이터센터 조성



전국 정밀도로지도
구축 완료



수소차 검사·
충전소 확충

2030

AI 기반 모빌리티 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